

민주연구원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적 합의”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월 22일(목),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이재명정부 실용외교적 합의”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한일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한일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제언하였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먼저 한일정상회담을 평가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관점에서 갖는 합의를 분석하였다.
 -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첫째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6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를 제시하였으며, 둘째 ‘셔틀외교의 안착’과 함께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 협력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했다. 셋째,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을 위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과거사 관련 현안을 공식 의제화한 의미를 지니며 넷째,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AI·지식재산보호 협력,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 경제·민생분야 양국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조 위에 대일외교의 목표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로 설정하였다. 한일 협력은 한미동맹의 공고화는 물론 대북한 공조,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안보 대응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이재명정부는 과거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브리핑은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이념·가치 편향이 아닌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재명정부 실용 외교는 국가 간 협력에서도 ‘국민 안전과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민체감형 외교’를 실천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과제로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 첫째, 「김대중-오부치 선언 2.0」과 같은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일 등 계기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60년의 한일관계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 둘째, ‘민주당 차원의 방일 대표단 파견’ 및 대일 의원외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방일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일 협력에 관한 민주당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한일의원연맹 등 초당적 대일 의원외교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맞게 ‘국민이 주체가 되는 한일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셋째, 양국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 대일정책의 기조와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과거사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넷째, 경제·과학기술 분야 합의 내용의 후속조치를 통해 ‘한일 경제·민생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민주연구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정부가 대일외교에서 실용외교를 중시하는 것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한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과 같은 한일관계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당은 한일관계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김대중의 정당’라는 사실을 자산 삼아 집권여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